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8월

“대북 농업협력, 새로운 모델 제시 필요”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발굴하는 심포지엄을 8월 28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8월 28일 양재동 aT센터 중회의실에서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민간은 물론 정부도 북한과 농업교류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력사업 평가, 방향 모색

1부는 김경량 강원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남북 경제교류협력 환경의 변화와 전략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교수는 “그동안 남북경협이 추진 과정을 살펴 보면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외형적 과시효과가 큰 사업에 치중하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남북경협에 있어서 남북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북한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구원 김영훈 연구위원은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의 현황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와 농업은 ‘자본 부족과 개혁 부진의 함정’에 빠져 있어 능동적 개혁 추진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농업협력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장기 침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북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에는 지원사업, 경협사업, 교류사업이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남북 농업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평가, 피드백의 체계적인 운영도 강조했다. 특히 “대북 농업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운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충환 통일부 지원협력팀장, 남성욱 고려

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2부는 이용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회로 열려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북, 농업 발전 유도할 수 있게 협력

이 소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농업지원 사업이 담보하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앞으로 대북 농업지원 사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확대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농업교류협력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하며, 민간단체는 풀뿌리 차원의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규 농림부 구조정책과장은 ‘대북 농업교류협력 환경의 변화와 정책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남북 농업협력의 정책 목표를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개혁·개방 여력비축, 농업부문 변화를 통해 개혁·개방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 남측 농업과 농업관련 산업의 활로 모색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향후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은 긴급 구호에서 북한의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차차 전환하고 기술협력과 생산기반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 나승용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장, 이병호 통일농수산사업단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월례조례 직원 참여형으로 틀 바뀌 주요 이슈와 부서이야기 등 발표



연구원은 8월부터 월례조례를 직원 참여형으로 바꿔 직원들의 관심속에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8월 1일 개최한 월례조례를 직원 참여형으로 바꾸고, 대회의실에서 '이슈 알아봅시다'와 '부서이야기'라는 두가지 주제로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슈 알아봅시다' 코너에서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현 우리농업의 최대 이슈인 한·미 FTA를 주요 내용으로 한·미 FTA의 농업부문 이슈와 5대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연구원의 역할과 협상 성과에 대해 밝혔다. 심공섭 총무인사팀장은 연구원의 경영이슈인 청사 지방이전 진행 현황을 설명했다.

부서이야기는 농산업경제연구센터 김연중 연구위원이 '따이공 무역 체험기' 발표를 통해 청도에서 인천까지 보파리상 체험과 중국농산물 유통과정을 설명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OECD 활동이야기'라는 주제로 연구원의 OECD 활동을 소개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길 당부했다.

김정호 부원장은 2개월 동안 연구원의 경영 전반에 대해 말하며 "향후 월례조례를 개선하여 더욱 알찬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농업·농촌 최신뉴스 제공

연구원은 9월 1일부터 중앙일간지와 경제일간지, 인터넷신문, 지방일간지, 전문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농업·농촌 및 연구원 관련 최신 뉴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지난 6월 1일 새단장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이용자의 요구도가 높았던 최신 농업·농촌 관련 뉴스 제공을 비플라이소프트사와 계약하여 9월 1일부터 제공하게 되었다. 메인화면에 '최신농업뉴스'란을 만들어 4시간 단위로 주요 농업·농촌 및 연구원 관련 뉴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아이디어 공모

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는 2007년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하반기 접수를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농업정책 및 농정·농림사업 리모델링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림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공모분야는 농림정책 3개 분야로 농정 신뢰회복, 농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농·도 상생을 위한 농촌 복합생활 도농간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농정·농림사업 리모델링 아이디어도 수집하고 있다. 공모 결과는 2008년 1월에 발표하고 당선작에 선정되면 포상과 함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농림 정책

「농업전망 2008」, 내년 1월 23일 개최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전망 2008'을 내년 1월 23일(수)에 개최할 예정이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농산물 주요품목의 수급 전망, 예상되는 주요 농정이슈 등이 발표된다.

'농업전망 2008' 주제 선정을 위해 농업관측정보센터는 9월 7일까지 올해 전망대회 참가자와 농업관측정보센터 모니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농업시리즈 2권 발간 프랑스 농업회의소, 칠레 과수산업

우리 연구원은 8월에 2권의 해외농업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해외농업시리즈는 '프랑스 농업회의소'와 '칠레의 과수산업 동향과 경쟁력' 등이다.

해외농업시리즈 '프랑스 농업회의소' 편에는 농촌지도 상담과 직업교육, 농촌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농업회의소를 소개하며 조직과 체계, 역할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칠레의 과수산업 동향과 경쟁력' 편에는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교역 현황, 주요 과일의 생산량과 생산시기, 우리나라의 과일 수출동향과 과수산업의 경쟁력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공모는 인터넷(www.cri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novelis1@krei.re.kr)로 작성하여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참조하거나 우리농업 희망찾기 담당자(02-3498-6532)에게 문의하면 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농업교류협력의 미래

김 영 훈 연구위원

최근 들어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고 있다.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의 초기일정에 관해 「2.13합의」를 도출했다. 이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문제가 해결되자 6자회담과 북미접촉이 즉시 재개되었으며, 한국은 쌀과 중유를 지원했다. 이에 호응하여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했다. 6자회담 체제의 향후 일정도 지속적으로 예고되고 있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남북공동변영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때마침 남북 양측은 평양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공동의 번영, 민족 통합과 관련된 모든 의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런 의제들이 어떤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쉽게 점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만남은 6자회담 체제의 진전과 맞물려 남북관계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우리 앞에 새로운 과제가 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변화에 조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시된 세 가지 중 경제문제와 관련된 것은 '공동의 번영'이다. 이 의제는 공동번영의 핵심적 수단으로서 남북 경제교류협력 확대가 중요하며 이번 기회에 양 정상들이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남북 경제교류협력 추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구체적인 분야와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농업교류협력을 통해 북한농업을 발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남북한

농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는 논의도 그 중 하나이다.

북한의 농업발전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또 농업발전을 통해 경제발전 초기와 도약 단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동력 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식량의 수입대체를 통해서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훼손된 산림이나 수리기반시설 복구는 국토가 지닌 생산기반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농업개발은 남북한 농업의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남한의 자본·기술·시장과 북한의 기반·노동력을 결합한 경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농업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북한 농업발전의 요건은 개혁과 자본

북한 농업이 발전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정시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요건은 제도개혁과 자본조달인데, 문제는 이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의 뒷받침이 없이 제도개혁의 유효성은 매우 낮으며, 제도개혁이 없다면 투입된 자본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농업을 대변하는 대부분의 지표가 식량 위기가 표면화된 1990년대 중반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는 어떨까? 북한의 현 체제와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개혁을 체제 불안을 부추길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경제개혁에 대한 북

한의 전향적 자세를 확인하지 않고는 대규모 자본을 지원·투자하는 데 선불리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남한 정부와 기업도 오랜 기간 심사숙고 중이다.

적절한 대안과 변화가 필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적절한 대안과 변화가 필요하다.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는 선도적인 시범협력사업이다. 이 농업협력사업은 북한의 경제특구와 인접한 농촌지역 몇 곳에 남북한이 함께 시범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기반 조성사업, 투자사업, 교류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양측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농업협력사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여러 하위 프로젝트가 포함된 종합적인 협력사업인 만큼 협의나 사업추진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높은 수준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 합의는 가급적 명료하고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메시지를 받아 사업을 성사시키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양측 정부의 실무담당자와 협력당사자들의 몫이다.

다행히 지금 높은 수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속도조절은 있겠지만 6자회담의 앞날이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정착과 민족통합은 물론 공동번영이라는 의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어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미래를 여는 토대로 함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



중국 농식품, 정규군과 게릴라 부대

김성훈 전문연구원

중국산 먹거리가 몰려오고 있다. 중국산 농·축·수산물의 급년도 수입액 추정치가 4조원에 육박하고, “파이공(代工)”들이 들어오는 고추나 참깨는 매일같이 한·중 페리호를 타고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중국 농식품은 우리 농가와 식품산업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그 위세가 마치 한국전쟁 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라간 국군을 몰아치던 중공군만큼이나 매섭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공군에 쫓겨 철수에만 급급하던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게릴라전에 연전연패

우리 소비자들은 중국산이라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국산 농식품을 먼저 찾는다. 이는 굳이 “신토불이(身土不二)”를 외치지 않더라도 국산 농식품이 수입산, 특히 중국산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신뢰의 결과이다. 이에 힘입어 대부분의 가정용 농식품 시장의 경우, 중국산 농·축산물이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우리 시장에서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식품 포장에 원료 원산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경쟁하는 “정규전”에서는 중국산이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 정보가 가려지거나 숨겨지는 “게릴라전”에서는 국산이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중·저가 외식점이나 재래시장 또는 동네 슈퍼마켓 등의 경우, 피아구별이 어려운 정글 속 게릴라전처럼 소비자들이 어떤 게 국산이고 중국산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틈타 저가 중국산 농식품이 이미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장악했다. 대표적인 예로, 김밥 체인점에서 사용되는 쌀과 각종 김밥 부재료와 비전문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갈비탕이나 꼬

리곰탕, 그리고 재래시장 등지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비포장 두부 등은 중국산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응 전략과 전술 세워야

일차적으로 저가 중국산을 사용하여 원가를 절감하여 이득을 취하면서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국내 외식업자 및 식품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계 기관의 소홀과 관련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산 농식품의 국내 시장 잠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전략)과 즉각적인 대처 방안(전술)의 수립이 요구된다. 먼저 전술적인 대응 방안으로, 원산지 증명 등 인증제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식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제도는 가공식품과 일부 외식업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매일 접하는 음식의 극히 일부분에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는 90평 이상의 대형 식당에만 적용되어 전체 음식점 수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산과 수입산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조속히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산 농식품의 입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왜 우리나라 농식품이 더 우수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막연히 국산 농식품이 좋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국산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을 살펴보

면, 우리나라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중국 농식품 중 이미 우리 것보다 수준높은 품목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농식품들은 국산보다 낮은 생산 비용으로 보다 우수하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들 농식품이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외면을 받고 있지만, 일단 특정 계기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태는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통해 계속해서 거듭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성 증대 노력 필요

식품산업 전·후방에 위치한 산지와 소비지사이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외식업체나 식품 가공업체의 국산 원료 농·축산물 구매 방식 중 상당부분이 전문 납품업자 등을 경유한다. 이러한 중간 유통단계는 규모화되지 못한 산지나 외식·가공업체의 일부 유통 기능의 대행으로 인한 것으로 유통 비용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화 및 조직화를 전제로 한 산지 농업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민간 부문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식품 시장은 분명 위기이다. 한·만 국경에서 인해전술로 밀려드는 중공군을 눈앞에 둔 국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잘 극복하느냐, 아니면 1.4. 후퇴 때처럼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느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R**

DDA 농업 모델리티 초안의 내용과 의미

임 송 수 연구위원

지난달 농업협상 회의에서 팔코너 의장은 모델리티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지금까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나, 합의 가능 영역이라 의장이 판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WTO는 비농산물시장접근에 관한 모델리티 초안도 함께 발표했다.

TRQ 속에 숨은 관세 상한

의장 초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UR 협상 때 미국과 EU간 블레어하우스 합의와 비슷하게 추진하던 G-4(미국, EU, 인도, 브라질) 각료회의가 결렬된 사실은 모델리티 타결 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에 G-4 회의가 농업 분야의 타협영역을 상당히 좁혔고 의장 초안이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자 협의를 통하여 연내 협상 타결도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WTO 회원국들은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다자협의를 통해 모델리티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자 및 그룹협정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특히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부터 회의에서 논의될 모델리티 초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자.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감축은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한다는 구간별 접근 방식 아래 선진국 48~73%, 개도국 32~49% 감축률을 제시하였다. 다른 쟁점은 민감 품목과 특별 품목의 선정과 대우이다. 일반 품목보다 1/3~2/3만큼 관세를 덜 감축하는 민감 품목 수는 전체 세번의 4% 또는 6%로 하되 국내 소비량의 3~6%를 시장접근물량(TRQ)으로 양허하였다. 우리나라가 주장해 온 수입량이 아니라 소비량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더 큰 폭

의 TRQ 수입 확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소비량과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늘, 감귤, 양파, 가공용 대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세율 품목(HS 10단위로 29개)과 미양허 품목(쌀 16개)을 전체 세번에서 배제한 것은 민감 품목이나 특별 품목 수의 축소를 뜻한다. 그러나 개도국 우대 조치로서 민감 품목 수를 선진국 수준의 1/3만큼 추가하고 TRQ 증량 폭을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명확하게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개도국만 활용할 수 있는 특별 품목(SP) 규정은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민감 품목보다 더 크게 신축성이 부여될 것을 확인하였고, 최소한 10% 이상의 관세감축을 시사하였다. 9월 논의를 거쳐 의장은 특별 품목에 관한 세부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나, 특별 품목의 선정 지표와 TRQ 증량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특히 G-33그룹) 간에 격론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속한 G-10 그룹이 반대해 온 관세 상한 설정은 일단 배제되었다. 그러나 관세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면 TRQ를 추가로 증량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관세 상한과 마찬가지로 지적이다.

미국의 딜레마, 국내보조

감축대상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및 블루박스의 합인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의 최대 감축률로 EU 85%, 미국과 일본 73%, 다른 회원국 60%가 제시되었다. AMS 감축률은 각각 70%, 60%, 45%이며 블루박스는 생산액의 2.5%, 최소허용보조 감축률은 50~80%이다. 개도국 감축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OTDS 5조원, AMS 1조원, 최


소허용보조 3조원, 블루박스 8,000억원 안팎으로 나온다.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 중심으로 양정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우리나라는 AMS 감축부담을 어느 정도 덜었다. 더 나아가 현재로서는 AMS인 변동형 직불 부분을 새롭게 규정한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품목 특정 AMS 상한 설정은 앞으로 시장변동에 따른 신축적인 품목 지원을 제약할 것이다.

9월 협상이 관건

국내보조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사정은 그동안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 7월 27일에 의회가 채택한 2007년 농업법(farm bill) 하원 안은 행정부가 제안한 것과는 반대로 일부 품목의 가격보장과 목표가격 수준을 오히려 높였다. 연간 286억 달러의 예산이 10년간 투입될 이 법안이 의회 상원에서도 커다란 변화 없이 채택된다면 미국의 국내보조 협상 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회원국과 더 큰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농업 모델리티 협상에서 회원국 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판단한다. 간단하지 않겠으나 이제 남은 과제는 미국이 최종 수용할 국내보조 수준과 개도국의 특별품목 및 특별수입제한조치(SSM)이다. 지난 G-4 각료회의의 결렬 원인은 농업이 아니라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이를 뒷받침한다.

9월에 농업협상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져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10월 중에 모델리티 최종안에 제시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DDA 협상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 농업, 기상이변으로 경영적자 확대

김태곤 연구위원

호주는 농산물 수출국 중에서 수출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는 '케언즈 그룹'의 중심국가이다. 케언즈 그룹은 우루과이 라운드 가 시작된 1986년 호주의 케언즈에서 결성되었다. 호주는 최근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무역자유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미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아세안,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걸프협력기구(GCC), 칠레 등과 협상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통상방침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외교의 기본으로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외교·무역의 우선지역으로 설정하여 무역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기상이변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기상이변, 호주농업에 심각한 타격

호주 농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농장제 농업이다. 2002년 현재 전국 경지면적 4,860만ha, 초지 3억 9,840만ha로서 농가당 평균면적은 경지 368ha, 초지 3,017ha, 합계 3,385ha로서 우리나라의 2,00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호주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두려워할 정도의 농업강국이지만, 호주 농업에 생산감소와 경영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범은 기상이변이다.

호주는 국토의 60% 정도가 농지이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 중에서 경지는 11%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축의 초지나 방목지로 이용된다. 경지는 주로 남부와 동부에 분포하며, 남동부는 쌀, 소맥, 대맥, 남서부는 소맥, 대맥, 동북부는 사탕수수 산지이다. 최근 2002년에 심각한 한발이 있었고, 2006년에도 한발이 발생, 곡물과 사료작물 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관개농업인 쌀은 금년도에도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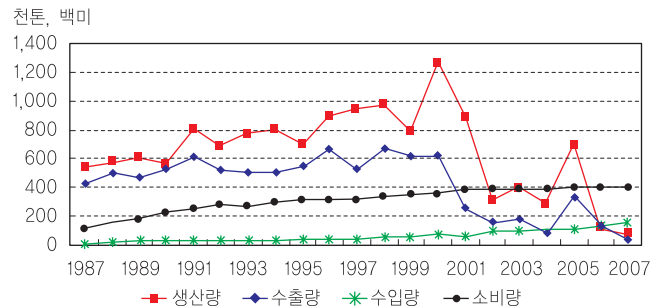
2006년도는 소맥 생산량이 전년대비 61%나 감소하였고, 대맥은 62%, 쌀은 83%나 감소하였다. 호주의 소맥 감산이 지난해 10월 이후 세계 소맥가격 폭등과 이에 연동된 옥수수, 대두 등 곡물가격 상승의 계기가 되었다. 호주의 소맥은 세계 생산량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량은 세계의 30%를 차지하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와 함께 전통적인 소맥 수출국이다. 호주의 소맥 감산이 세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쌀 수급에 특히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생산, 소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도 생산은 사상 최고인 125만 8,000톤(백미기준), 수출 61만 7,000톤을 기록하였다. 이후 물 부족 영향으로 감산이 되어 2006년은 생산 12만톤, 수출 12만 5,000톤을 기록하였다. 2007년은 더욱 감소되어 생산 7만톤, 수출 2만 5,000톤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비는 40만톤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이 증가, 2007년은 15만톤으로 늘어나는 등 쌀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국 농무부).

호주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발표한 2006년도 농가 경영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가당 평균 5만 9,800호주달러(1호주달러 약 720원, 이하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뉴사우스웨일즈주가 8만 5,648달러, 빅토리아주는 7만 3,287달러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호주 쌀 수급동향, 1987~2007년



자료 : 미국 농무부, 2007. 8.

경영형태별로는 곡물전업농이 11만 2,349달러, 곡물·가축 복합농은 6만 2,454달러, 낙농부문은 7만 9,476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곡물농가는 생산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이 컸으며, 낙농가는 조사료 구입비용과 노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발 피해로 방목환경이 악화되어 낙농가의 조사료 구입량이 확대되었고 가격도 2배 상승하여, 호당 조사료 구입액은 전년대비 52%나 상승하였다. 최근 도시지역의 임금상승으로 농업노임 상승과 노동력 확보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구촌 규모의 기상이변에 주목해야

한발 피해에 대해 호주 정부는 소득보상이나 이자보전 등과 같은 경영대책을, 물 부족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를 단수, 물 배분을 조정하면서 수자원확보에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한발이나 화재 발생빈도가 늘어나 호주 남부, 동부의 대부분의 지역과 뉴질랜드 동부 지역에서 2030년까지 농업과 임업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구온난화, 빈발하는 기상이변, 물 부족 등의 요인이 세계 농업에 위협을 주고 있다. 강수량이 적은 호주에서 심각성이 높을 뿐이다. 수출대국의 생산감소는 수입국의 식량안보에도 직결된다. 지구촌 규모의 기상이변에 주목해야 한다. [R]

8월의 농정 주요 동향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필요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와 특정 품목에 대한 도입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포도주와 위스키를 제외하고도 720여 품목에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품목은 7월 11일 현재 33개에 그쳐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김치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산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김치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리적 표시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리적 표시제 관리 기관이 농림부와 특허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하더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이 보완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지명을 활용한 유사 상표 등에 대한 제제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장 범위의 설정, 관할 부서 일원화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차 안전성관리 강화 대책 추진

시중에 현재 유통 중인 티백녹차에서 살충제 농약인 이피엔(EPN) 잔류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녹차 및 녹차음료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현미녹차 원료의 대부분이 저율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차 조제품으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녹차 생산 농가의 피해가 크다.

이로 인해 국내 및 수입 녹차원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어 정부는 녹차 안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과 녹차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녹차주산지를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하였고, 수입산의 원산지 둔갑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도 추진하였다. 또한 원료 차잎에 대한 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약성분 잔류 여부를 추적·조사할 예정이다. 국내 녹차 재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녹차 잎을 채취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산 녹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친 보성과 하동에서 생산되는 현미녹차를 홍보해야

한다. 또한 국산 녹차의 친환경 재배 유도를 통한 수입품과의 차별화와 수입 녹차의 엄격한 위생검사, 별도 품목분류를 통한 차별화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8월 6일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999년 2월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명을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 농업정책 대상자 확대, 법적 적용대상 범위를 식품 및 농자재 산업 육성까지 확대, 5년 단위로 향후 10년간의 식량 비축·자급목표 설정 등이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농업경영체 육성과 관련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가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품질 차별화, 농산물 및 식품 안전성 강화, 지적재산권 강화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난 7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한 「식품산업진흥법(안)」은 타 부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 발표

지난달 정부는 현재 164개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상수도 사업구조를 2009년까지 30개 이내 유역권으로 개편, 이를 공영화 또는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산업 육성 배경이 물산업의 미래 성장성과 함께 환경적, 보건·위생적 가치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낙후된 물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소요될 정부지출을 대체하고, 민간참여 확대, 표준화, 개방화 등 물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물산업 민영화가 농업에 미칠 영향으로 민간수도업자, 공업용수를 확보하려는 기업,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업인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 물산업 육성 대책은 상하수도의 산업화와 관련이 깊고 농업용수의 관리·공급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미래에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도 있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신기술이전촉진설명회 개최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신기술이전촉진설명회를 8월 3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8월 3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특허 기술을 신속히 농산업 현장에 이전·확산시키고자 '신기술이전촉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기술이전촉진설명회에는 기능성 물질과 관련된 특허기술이 한 자리에 전시되어 더욱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다.

개회식에서 이규천 소장은 "이번 행사가 잠재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교류의 장이 되어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대 최용희 교수 사회로 고구마 줄기로부터 페루릭산을 추출하는 방법을 경상대 김선원 교수가 발표하는 등 4가지 특허 기술관련 내용이 발표되었다. 2부에는 강원대 임학태 교수의 사회로 고려대 조홍연 교수가 알코올성 간섬유화 예방

및 치료용 식물유래 추출물 특허 기술 등 4가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농경토론회 개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평양과 대흥단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식에 참석한 김영훈 연구위원이 8월 16일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북한 농업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직원들이 참석, 사진을 통해 북한 농업실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뒤 토론했다.

연구진 주요 동정

△ 김정호 부원장은 8월 23일과 24일 한국농업경제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국 농업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8월 28일에는 KDI 국제

정책대학원에서 '개방화 시대의 농업 구조와 경영'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8월 23일과 24일 한국농업경제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허덕 연구위원은 8월 7일 장성축협 회의실에서 한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와 한우산업의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8월 29일 경기도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세미나에서 '기후협약 변화에 대비한 경기도 농업 대응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송수 연구위원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린 미국농업경제학회에 참석하여 '한국농정개혁과 직접지불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8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제주형직접지불제 정책 토론회에서 '발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장철수 연구위원은 8월 29일 상지대학교에서 열린 산림경제학회에서 '산림의 공익가치와 환원에 대한 국민적 조사'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연구원 내방객

△길림농업대학 한성환 경제관리학원 원장 등 8명이 8월 29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중회의실에서 농촌관광관련 연구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연구원 30년사 원고 및 자료 수집

우리 연구원은 2008년 4월 1일자로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갖고 계신 추억의 창고를 열어 보세요.

사진과 육필원고 등 연구원 생활을 기념하며 추억할 만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면 연구원으로 보내 주세요.

유용하게 활용하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 수집자료: 육필원고, 연구원 관련 서류, 사진, 기념품, 각종 사료
- 수집원고: 연구원 생활 추억담, 기타 30년사에 담겨야 할 원고
- 담당: 간사 정민국(02-3299-4263),

조태희(02-3299-4226)

* 자료와 원고를 제공하는 분께는 기념품과 소정의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정보센터와 업무협력협정 체결

농업관측정보센터는 8월 29일 농림수산정보센터 회의실에서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와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로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림수산정보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업관측정보와 연구결과 확산에 노력하고, 해외 도매시장 가격수집과 전자태그(RFID) 실시간 물류정보 생성 및 활용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